수출이 원화값 뒷받침… 강달러 상쇄 '내년 1200원' 기대감

美 금리인상 우려에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 달러당 1333.6원
3분기 주요 20개국 중 절상률 1위
4분기도 전반적 하향안정화 흐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미 연준의 금리 전망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이슈로 떠올랐지만, 원화값은 오히려 상승세다. 주요국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원화는 탄탄한 수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33.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종가보다 3.9원 내린 수준으로,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측치를 웃돌며 달러값을 끌어 올렸는데도,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원화값 상승)했다.

◆ 뚜렷한 '달러 강세'

최근 달러는 다른 통화 대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2.2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과 비교해 0.58 오른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달러가 강세 국면인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장 경계감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0.3% 상승을 기록했는데, CPI와 근원CPI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12월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 거래소(CME) 페드워치는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100%로 확신하고 있으며, 단번에 50bp(1bp=0.01%p)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14.9%로 전망한다.

◆ '꿋꿋한' 원화값…하향안정화 지속

달러값이 강세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외적인 달러 강세 압력을 상쇄할 만큼 원화값의 상승요인이 뚜렷해서다.

원화값의 최대 상승 요인으로는 올 상반기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대비 과도하게 평가절하됐던 원화값이 꼽힌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 장기화와 국내증시 조정 영향으로 지난 7월 초 달러당 1555.8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상승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절상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강세로 전환했다.

원화값의 강세는 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낙폭은 지난 10월부터 한풀 꺾였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기업의 달러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원화값의 약세 요인이 됐던 해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도 잦아든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내년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는) 내년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원·달러 환율은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하향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이유정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모습이며, 반도체 기업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 수급 측면의 부담도 있다"라며 "연말까지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라 완만한 원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계대출 6.4조 ↑… 한달 새 증가세 전환

금융위, 10월 가계대출 동향
주담대 4조, 기타대출 2.4조 증가
감소했던 신용대출 1.2조 늘어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4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 2조2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5월 9조3000억원 증가한 이후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9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0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9월 2조9000억원에서 10월 3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5조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9월 2조9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2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원 증가해 전월(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9월 1조8000억원에서 10월 2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정책성 대출도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2조7000억원 감소에서 반등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2000억원 증가해 전월 7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권은 3000억원, 저축은행은 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연간 총량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시기 대출 쏠림 등으로 일률적인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대출이 순증으로 전환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감소세 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변동성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 금융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정년 등 생애·실수요자, 지방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보안원, 개인정보 650건 외부 유출

금융권, 해킹피해 여파에 촉각
"광고성 이벤트 정보 내역 유출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안돼"



11일 금융회사 평가를 지원하는 상시평가 시스템이 해킹돼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 본원의 모습. /뉴시스

국내 금융회사들의 보안사항을 평가해 온 금융보안원 조차 해킹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금융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650여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보안원의 해킹 피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상시평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한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다만, 차단 대응에도 일부 정보가 외부로 추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접수받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 점검을 수행,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해킹 대상이 된 금융보안원 상시평가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평가에 필요한 행정서식 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창구다. 제출 서식에는 금융회사 상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와 더불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에 수행한 업무 내용, 법령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 등이 담긴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총 650여 건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행정서식 약 200건, 행정서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300여 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마스킹 된 이름, 마스킹 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350여 건이다.

금융보안원 측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광고성 이벤트 정보 전송 내역, 동의서 등 행정서식이 대부분으로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사고 확인 즉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는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원인, 피해 범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법령에 따라 제출한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자료가 역설적으로 해킹 위험에 노출되면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매년 1분기 말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 내용과 법령 위반 사항, 조치 결과 등을 금융보안원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체 정보보안 강화 노력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더라도 이를 위해 외부에 제출한 자료까지 유출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2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은행권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보안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이다. 보안에 문제없다고 평가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뿐 아니라 보안업체 등 보안을 관리하는 외부 기관의 문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긴급 점검반을 꾸려 금융보안원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가리봉 옛 시장부지, 청년 주거공간 만든다

서울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
공공임대 181가구, 주차장 등 조성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옛 시장 부지가 청년 주거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기존 건축계획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청년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구로구 가리봉동 126-40 일대로, 대지면적 3708㎡에 지하 3층~지상 13층, 연면적 1만7982㎡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81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25㎡ 137가구, 31㎡ 44가구다. 지하 1~3층에는 공영주차장 166면이 조성되며, 저층부에는 청년센터와 가리봉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방화장실 등이 마련된다.

사업지는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역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가리봉시장에 인접해 있다. 서울시는 청년 인구와 전통시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오랫동안 활용이 저조했던 가리봉 옛 시장 부지가 청년 주거공간과 지역 생활편의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지역주민과 전통시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